

# “암 집단발병 내기마을 조사결과 공개를”

(남원시)

### 전북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히면 법적 문제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구체적 피해구제대책 마련해야”

전북환경단체가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시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은 최종 결과를 보고받거나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400여쪽에 이르는 암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밝히면 마을 주민과 주변 아스콘 공장 간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북환경연합은 “결과 보고서는

‘지자체는 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만큼 전북도와 남원시는 과거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 남원시가 2014년에 서울대 백도명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이뤄졌다.

2년간 6억5,000만원을 들여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팀은 ‘인근 아스콘 공장이 가동될 때 발암물질이 증가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보고서는 공장이 가동됐을 때 대기

중 미세 분진의 일부인 다핵 방향족 화합물(PAHs·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포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핵 방향족 화합물은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로 발생하며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폐암 환자가 살았던 집 실내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의 수치가 다른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폐암 환자 6명 가운데 5명이 장기 흡연한 사실도 위험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위험 요인이 폐암 발생에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내기마을에서는 지난 수년 새 마을 주민 17명이 폐암과 식도암 등 각종 암 질환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마을 지하수의 라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성 물질 노출에 의한 집단발병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간단한 요약본과 권고안만 주민에게 전달하고 자세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서를 분석해 실제 아스콘 공장과 암 질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대통령 5·18기념사도 최순실 PC에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내부 문서를 공식 발표보다 먼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최씨의 PC에서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의 5·18기념사도 일부 수정된 부분이 확인돼 5월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JTBC가 최씨의 PC에서 찾아내 공개한 ‘제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박 대통령이 실제 기념식에서 낭독했던 기념사 전문과 비교해 본 결과 10여곳의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3주년 5·18 기념사는 기념식이 열린 2013년 5월18일 하루 전에 최씨의 PC에 저장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사는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추가되거나 문장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다듬어졌다.

먼저 최씨의 PC에서 발견된 기념사 중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문장이 박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에서 삭제됐다.

기념사 끝 부분에서는 ‘저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을 믿고,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는 문장이 아예 빠졌다.

당시 5월 단체는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보수세력의 5·18 역사 왜곡 문제, 5·18의 원인과 공권력에 의한 학살 등이 빠진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놓고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기념사 문장이 다듬어진 흔적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은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으로,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것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로 다듬어졌다.

‘저 역시 매년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낍니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실제 기념사에 추가된 부분이다.

다만 최씨가 이 내용을 수정했는지 여부, 수정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단일 5월 영령의 넘고 송고한 희생 정신을 위로하고 5·18정신과 광주정신을 잊지않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5·18기념식의 기념사가 최씨의 손을 거쳤다면,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5월 영령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 기밀자료를 보내고 손질 등 도움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보도를 보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대변인.

## 박 대통령 사과 방송 보는 더민주

### 국회 남북특위 ‘통일정책 여야 합의안’ 만든다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대북 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 같은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안이 된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 기조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대북 위기에 따른 대내외 사회경제적 비용도 높아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상당부분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추미애 “박 대통령, 전혀 상황인식 못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국민들이 의아하기 짝이 없는 혼돈 상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최순실’을 통한 연설문 개입 사실을 시인한 데 대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상황인식이 없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한 달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현 정부의 국기문란을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단순히 개인적 관계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선언에까지 비선 실세가 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그 인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언제 자르느냐까지 최순실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국민들이 의아하기 짝이 없는 혼돈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최순실이 아직도 인명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해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다.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스

## 도의회, 혁신도시 국가기관서 첫 의원 연찬회

### 26~27일 지방행정연수원·농촌진흥청에서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등의 역량강화 위해

전북도의회가 내달 예정인 정례회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국가기관에서 연찬회를 갖는다.

전북도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의 제2차 정례회는 11월8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은 연간 7500여명의 국내외 공무원과 1만 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전문적으로 교육·연수를 받는 국가기관이다.

도의회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 인해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활성화되고 관

객이 증가한다고 보고 기관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연찬회 정소를 결정했다.

황현 도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북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이 부여해준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경찰, ‘살수차·드론’ 예산 확보 시동

### 살수차 업그레이드용 4.7억원·드론개발 24.5억원… 인권침해 논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 장비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살수차와 드론 장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이 내년도 예산 가운데 4억6800만원을 요구한 살수차 안전 증진 장비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존 살수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 안전성 증진 세부 도입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19대의 살수차에 1대당 2463만원의 장비 도입을 계획 중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새로 편성한 안전성 증진 장비 예산은 사실상 살수차의 업그레이드 예산에 불과하다”며 “현재 살수차가 사람에게 쏠 때 가슴 이하로 살수하는 것이 가능한 장비가 애초에 아니다. 결국 살수차의 안전성은 사람에게서 직접 살수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해 치안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치안현장에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날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스

## 민주당 “靑 문고리 3인방, 국회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와 관련,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문방 ‘문고리 3인방’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거간 노릇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비서관, 매일 한 시간 이상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호성 비서관, 운영위원회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하지 않다고 위증한 이재만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이 반드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공식 시스템이 아닌, 측근과 비선 실세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또 일어났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파악 중”이라고 개탄했다.

기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참모진도 예외는 없다”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기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불쾌할지라도 일언지하에 잘 리버렸던 개헌론을 부랴부랴 들고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개헌론 운운하기 전에 먼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순바대로 진실을 기릴 수 없다. 청와대가 버티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특단의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놔다.

기대변인은 “더 이상 검찰이 미적대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도록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본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예앞서 박원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운영위는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건을 추진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해당 라인에 없었다면 모를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스